

## 부처 간 칸막이 없애고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 만든다

- 15일 ‘문화가 있는 산업단지 조성’ 위해 국토·문체·산업부 TF 발족
- 청년 근로자지자체 등 현장과 소통하며 인프라 프로그램 지원, 제도개선 추진

- 문화와 산업, 국토를 담당하는 부처가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부처 간 벽을 허물고 하나의 팀으로 힘을 합친다.
- 국토교통부(장관 박상우, 이하 국토부), 문화체육관광부(장관 유인촌, 이하 문체부)·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안덕근, 이하 산업부)는 3월 15일(금) 오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에서 ‘문화가 있는 산업단지 조성’ 전담조직(이하 TF)을 발족하고,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.
- 산업단지는 지난 60년간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경제 성장을 견인해 왔으나 현재는 노후화와 생활·문화 기반시설 부족으로 청년들이 근무를 기피하고 있으며 이는 입주기업 구인난의 원인이 되고 있다.
  -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창원에서 열린 열네 번째 민생토론회(2. 22.)에서 관계부처에 “청년들이 살며 일하고 싶은, 문화가 풍부한 산업단지 조성”을 지시한 바 있다.
  - 국토부와 문체부, 산업부 등 3개 부처는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지난 3월 6일, 울산시와 창원시 등 산업단지 담당 지자체와 문화예술 분야 전문가를 만나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부처 간 TF를 구성해 본격적으로 협업해 나가기로 결정하였다.
- 이번 TF는 국토부 국토도시실장과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,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이 공동으로 이끌고, 부처별 담당자와 한국토지주택공사, 지역문화진흥원,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관련 기관이 함께 참여한다.

□ TF에서는 청년 근로자와 지자체 등 현장과 소통하며 부처 간 협업 방안을 논의한다.

○ 구체적으로 ▲국토부의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, 산업부의 구조고도화 사업 등을 통해 구축한 기반시설에 문체부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접목하는 등 부처 간 사업 연계 방안, ▲ 신규 국가산업단지 계획단계부터 문화시설 조성을 위한 관계부처, 지자체 협력 방안,

○ ▲ 산업단지와 지역주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문화예술 지원 방안, ▲ 산업단지 내 문화기업 입주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을 다룬다.

□ 국토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“국토부는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뿐만 아니라 신규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담당”하고 있다며,

○ “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15개소는 현재 토지이용계획을 수립 중으로,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계획 수립단계부터 문화시설이 충분히 배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”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	책임자	과장	김민태 (044-201-3674)
		담당자	사무관	조계환 (044-201-3677)
담당 부서	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과	책임자	과장	이선영 (044-203-2611)
		담당자	사무관	지나은 (044-203-2631)
담당 부서	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	책임자	과장	김종우 (044-203-4430)
		담당자	사무관	최준혁 (044-203-4407)


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
**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·의원으로**



## □ 추진 배경

- 노후 산업단지 증가\*로 경쟁력 저하, 국가·지역경제 성장 한계 도출

\* 착공 20년 경과한 노후산업단지(개): ('00) 38 → ('10) 258 → ('15) 393 → ('22) 471 → ('25) 526<sup>예상</sup>

- ⇒ 노후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복합적인 토지이용 촉진을 위해 재생사업\* ('09, 산업입지법 개정) 및 활성화구역 제도 도입('16.2, 산업입지법 개정)

\* (사업현황) '09~'23년 42곳 사업 추진, 기반시설 확충비 국고보조(50%)

## □ 재생사업 개요

- (개념) 산업구조의 변화, 산업시설의 노후화 및 도시지역 확산 등으로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의 정비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

- (대상) 착공 후 20년 이상 경과된 산업단지 등

- (주요내용) ❶토지이용계획 변경을 통한 복합용지\* 확충으로 편의·복지 시설 증대, ❷도로, 주차장, 공원·녹지 등 기반시설 확충·개량을 통한 인프라 개선, ❸업종배치계획 재수립으로 업종 고도화

\* 산업시설(공장 등)과 지원·상업 등 편의시설(식당·카페 문화·복지시설 등)이 함께 입주할 수 있는 토지

- (절차) 재생사업지구계획 수립(지자체) → 관계기관 협의 → 산업단지 관련 위원회 심의 → 재생사업지구계획 승인·고시 → 사업 착수

## □ 활성화구역 개요

- (지정)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(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)가 재생사업지구 내에서 전체면적의 30%까지 지정

- (내용) 토지용도를 유연하게 전환하여 상업·문화·지원·산업 등 기능을 집적하여 고밀·복합개발

- (절차) 활성화계획 수립(지자체) → 관할 시군구 의견청취 → 관계 행정 기관 협의 → 국토교통부 승인 → 활성화구역 지정(지자체)

## □ 사업개요

- (재생사업)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생산성·경쟁력 저하 극복을 위해 기반 시설 개량(도로·주차장·공원·녹지), 지원시설 확충 등 재생사업 추진('09~)
  - \* (사업현황) '09~'23년 46곳 사업 추진, 기반시설 확충 위한 국고보조(5:5 매칭)
- (활성화구역) 노후산단의 전환 촉진을 위해 기반시설 정비 뿐만 아니라 각종 문화·편의·지원 기능의 증대 필요
  - 이에, 재생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활성화구역 제도 도입('16), 산단 내 핵심 거점 조성 및 주변 확산 도모

## □ 주요 내용

- (근거) 「산업입지법」 제39조의12
- (지정)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(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)가 사업지구 전체면적의 30%까지 지정 가능
- (절차) 활성화계획 수립(지자체) → 관할 시군구 의견청취 → 관계 행정 기관 협의 → 국토부 승인 → 활성화구역 지정(지자체)
- (시행) 국가·지자체, 공공기관, 지방공사 등 산단개발사업 시행자

## &lt;재생사업 활성화구역 특례(법 제39조의13)&gt;

- ① 「국토계획법(§77, §78)」 건폐율, 용적률 완화(용도지역별 최대한도 허용)
- ② 「산업입지법(§39의15)」 개발이익 재투자(용지매각수익의 25% 이하) 면제
- ③ 기반시설 설치비용 우선 지원(국가, 지자체)
- ④ 각종 법률 규정 미적용(「주택법(§35)」 주택 배치 및 부대복리시설설치·대지조성기준, 「주차장법(§19)」 부설주차장 설치, 「공원녹지법(§14)」 도시공원·녹지 확보, 「문화예술진흥법(§9)」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)

## □ 추진현황 : 5개 산단 총 8곳 선정 · 추진 중

산단명	사업기간	구역지정	면적	시행자
서대구(일)	'16~'21	'16.12	14,874㎡	LH(리츠)
부산사상(일)	'18~'25	'18.12	17,384㎡	부산도시공사
성남(일)	'19~'24	'19.12	13,563㎡	LH(리츠)
대전(일)	'20~'24	'20.11	99,514㎡	LH
부산사상(일)	미정	준비중	30,127㎡	J&C컴퍼니 등
성남(일)	미정	준비중	11,000㎡	대유위니아
대전(일)	미정	준비중	54,223㎡	대전도시공사
구미1(국)	미정	준비중	29,058㎡	구미시

### 참고3

### 신규 국가산업단지 현황(15개) ※ 대용량 파일 별첨

